중도일보

2019년 07월 29일 (월)
기획 09면



"지역 문제 주민이 전문가"… 도정참여 활성화 박차

충남도는 도민이 주인되는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인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 서훈 격상 운동을 통해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1등급'으로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고, 또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중도일보는 공동캠페인을 통해 충남도의 주민자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방정부' 실현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정책 추진
유관순 열사 서훈격상 운동 등 민간단체 활동 성과

지역현안 논의 공간으로 '충남공감마루' 건립 예정
도민 평가단·정책서포터즈 등 각계 의견 청취 만전

▲주민참여 혁신모델 발굴=도는 일선 시·군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 주민참여형 자율사업 대상지 36곳을 선정해 육성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컨설팅 지원, 합동워크숍 개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도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혁신모델을 발굴해 충남형 주민자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이를 넘어 전국 표준모델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도에서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일선 시·군이 연이어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청양군 등 도내 4개 시·군이 선정돼 각각 1억원씩 지원받는다. 또 국토교통부의 '주민 제안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충남에서 유일하게 금산군이 선정돼 3억6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금산군은 유휴 행정공간인 추부119안전센터를 활용, 추부문화차방, 다문화 언어교실, 농기계 수리 등 주민소통·상생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서명운동=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선양해 나가기 위해 기존 3등급(독립장)에서 1등급(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상향하기 위해 도내 82개 사회단체들과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100만인 서명운동이다. 주민들은 충남도는 물론 타 시·도 관련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으로 서명부를 작성하는 등 서훈등급 상향을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서훈을 1등급으로 상향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 서명운동=지난 5~6월 충남·대전지역에서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도내에서는 당초 목표했던 50만명을 훌쩍 넘는 6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 민간단체들은 향후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주민과 함께 저출산 극복=저출산 위기를 사회 모든 분야와 공감하고, 도민들이 직접 필요하고 원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기 위해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덕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양승조 지사의 정책특강과 500인 정책토론,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됐다. 도는 이날 도민들이 뽑은 '10대 우선 추진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과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양승조 충남지사가 민선 7기 공약을 도민에게 심의 받았다. 사진은 양 지사가 지난해 9월 '민선7기 도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충남도 도민배심원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도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공감마루 건립 추진=도민과 중간 지원기관 및 사회단체들이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인 '충남공감마루'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공감마루는 홍성군 홍북읍 일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10억9000만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착공,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다. 도는 이 곳을 향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실험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했다. 도는 앞으로 주민 공모사업 규모를 2020년까지 1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투자 방향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참여예산 우수실적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도민에게 듣는다=도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정에 각 계각층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먼저 180여 명으로 구성된 '도민평가단'은 도의 주요사업과 공약사업에 대한 현장평가에 참여해 정책을 건의하는 등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1000여 명이 참여한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정책제안, 주민홍보 기능을 담당한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주민참여를 통해 도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했다"며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도민참여예산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참여를 활성화해 도민이 자치분권 시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용수 기자